

# 낙서범 한명 잡자고... 기초수급자 3700명 들쭉신 광주경찰

광주 경찰이 낙서범을 잡기 위해 일선 자치단체에 3700여명에 달하는 광주지역 '전체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 대한 민감한 인적 사항을 요구한 것과 관련, 초보적 인권마저 무시한 수사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이번 수사와 관련,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찰의 일관된 의식 수준을 단적으로 드러냈다는 지적도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수사권 남용' = 광주지방경찰청은 5개 구청에 1965년 1월1일 ~ 1985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남성 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주소 등 인적사항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

지난 15일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

문화재단 건설현장·층장 등 16곳에 현 정권을 비판 한 내용의 낙서를 한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이 최근 범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CCTV화면을 확보한 뒤 탐문 과정에서 해당 남성이 '기초생활수급증을 가지고 다닌다'는 제보를 받은 데 따라 이뤄진 조치다.

처칠한 수사 과정을 거쳐 해당 남성이 정말 기초생활수급자인지, 대상 지역을 보다 구체화 시키지도 않고 단순한 제보만을 근거로 광주지역 3792명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개인정보와 얼굴 사진을 요구했다는 얘기도. 여기에 광주지역 일선 자치단체도 동조, 별다른 불만이 없이 개인 동의조차 받지 않고 버젓이 대상자 명단을

**정권비판 CCTV 용의자 제보받고 추적하러**  
**기초수급자 신상자료·사진 5개 구청에 요청**  
**구청들 고민 없이 버젓이 민감한 자료 제공**  
**인권 무시 과잉수사...개인정보 유출도 심각**



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허술한 의식 수준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김경진 변호사는 "김·경이 압수수색을 할 때도 수사에 필요한 부분만 하는데 이번 경우 수사권 남용 또는 과잉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최소한 용의자가 어느 동(洞) 또는 구(區)에 사는지 정도까지 파악한 뒤 자료를 요구해야 하는 인데, 수사에 불필요한 자료까지 보냈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각 구청에서 자료 협조를 해주지 않는 게

맛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변 소속 김정희 변호사는 "경찰이 범죄 수사를 위해 관련 자료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한 명 잡는데 천명 자료를 내놓는 건

개인정보를 조회한 혐의 등으로 15명 일 뿐만 아니라 수사방법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 정계로 본 허술한 개인정보 보호 의식 = 이번 수사는 경찰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안일한 의식 수준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김 현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공개한 경찰청의 '경찰관 비위행위 현황'에 따르면 사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스스럼없이 유출하거나 적발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들에 대한 징계도 '솔방방' 수준에 머무르는 등 경찰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무신경함을 고스란히 엿볼 수 있다.

광주·전남지방경찰청의 경우 지난 2012년 직무 목적 외 사적으로 전산·

개인정보를 조회한 혐의 등으로 15명이 감봉·견책 등 징계 처분을 받았다. 당시 광주청에서는 개인정보 무단 유출 실태에 대한 자체 감사를 통해 32명이 199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무단 조회·유출한 것을 확인했음에도 징계는 1명에 머물렀다. 전남청도 150명이 1300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 불법 유출한 사실을 밝혀냈지만 14명만 징계하는 수준에 그쳤다.

또 경찰청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긴급 자체 점검 결과'에서도 68개의 개인정보 관리시스템 중 27개(39.7%)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알려진 바 있다.

/김지필기자 dok2000@kwangju.co.kr  
 /이종철기자 golee@kwangju.co.kr

## “야박해진 한국인”

### 구형 폴더폰·가방 분실 재일교포가 본 씁쓸한 세태

휴대전화 습득한 50대 “10만원 주고 찾아가라” 가방 찾아준 택시기사는 “택시비 달라”며 돈 받아

“마음이 아픕니다. 고국의 인정이 이렇게 야박해졌나...”

재일교포 구모(77)씨는 경찰에서 어렵게 딸문을 열었다. 그는 택시에서 휴대전화와 가방을 잃어버리고도, 먼저 돌려주겠다는 전화 통 받지 못했다. 오히려, 한 국말을 잘 못하는 자신에게 돈을 요구한 사립할 때문에 마음의 상처만 입고 고국을 떠나야만 했다.

그는 지난 1970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0년간 수감됐었다. 서슬 퍼런 시기, 누나를 만나기 위해 북한에 간 게 화근이 됐다. 무혐의 판결을 받기 까지 40년을 쫓기듯 일본에서 지내야 했다. 모 기업의 회장까지 오를 만큼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졌다. 그는 마음속에서 항상 고국을 품고 있었다.

지난 19일, 그는 광주를 찾았다. 남구 월산동 명문중학교에 한자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날 밤, 숙소에 관한 통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그는 휴대전화를 그만 택시에 놓고 내렸다.

/박정필기자 halo@kwangju.co.kr

## 광양 주택 화재 2명 화상

25일 0시40분께 광양시 다담면 도사리 장모(83)씨의 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1동(면적 107㎡)을 태우고 소방서 추산 38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4시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1층에서 잠을 자던 장씨와 딸(65), 장씨의 사위인 김모(69)씨가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고 부산지역의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층 화장실에서 연기와 불길의 치솟았다”는 딸의 진술 등을 토대로 과과수에 현장 감식을 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광양=박정필기자 pyj4079@

---

## 범행현장 돌아왔다 절도범 달미

○~길을 가던 여성의 핸드백을 훔쳐 달아난 20대 절도범이 재범을 위해 다시 범행 현장으로 돌아왔다 경찰에 달미.

○~25일 광주서부경찰청에 따르면 정모(29)씨는 지난 24일 오후 5시30분께 광주시 서구 관촌동 A아파트 진입로에서 길을 가던 장모(여·23)씨의 핸드백을 가로챈 뒤 달아났다는 것.

○~범행 후 택시를 타고 광주역으로 도주한 정씨는 가방에 현금이 없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범행 장소 인근으로 돌아왔는데, CC(폐쇄회로)-TV로 도주도를 역추적한 경찰이 주변 PC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정씨를 현장에서 검거.

/박정필기자 halo@kwangju.co.kr

## 안도현 시인 항소심 무죄...1심 일부 유죄 뒤집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53·우석대 교수)이 25일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일부 유죄를 받은 것을 뒤집은 판결이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25일 안 시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판결에서 허위사실 공포와 후보자 비방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판결로 정정된 후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 '후보자 비방죄는 인정되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적 이익과 후보자 적격성 판단 자료를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공공의 이익이 함께 있다'면서 "유권자들에게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게 하려는 '공공의 이익'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또 게시물의 내용이 진실로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검찰의 허위성 입증 또한 충분하지 않고 피고인이 진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며 "범죄 요건을 갖췄으나 범죄

##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0개>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액 [단위:원]	비고
2013타경 26386	1	화순군 북면 이천리 328 2079㎡	전	11,434,500 11,434,500	농지취득자격증명
	2	화순군 북면 서유리 산 103 9322㎡ [공유자 오근학지분3분의1전부]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제한]	임야	9,011,257 9,011,257	분묘소재, 분묘기 지권설정여지있음
2013타경 26836	1	광산구 중정동 826-32 112㎡ [매각제외건물]	대	235,200,000 235,200,000	농지취득자격증명
	2	정선군 황룡면 아곡리 163 3607㎡	답	46,891,000 46,891,000	농지취득자격증명
2013타경 29200	1	담양군 봉산면 대추리 1063-6 664㎡ [인접지, 대추리 1063-7, 1072-8외 지적계별명확]	답	14,608,000 14,608,000	농지취득자격증명
	2	동소 1065-13 602㎡ [인접지, 대추리 1065-14 지적계별명확, 일부부하전차축]	답	13,846,000 13,846,000	농지취득자격증명
	3	동소 1235-5 2083㎡	답	60,040,000 60,040,000	농지취득자격증명
	4	동소 1235-6 919㎡	답	60,040,000 60,040,000	요, 일괄매각
2013타경 29507	1	영광군 대마면 월산리 814-9 849㎡	전	18,320,100 18,320,1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2	동소 1096-1 1729㎡	답	17,290,000 17,290,000	농지취득자격증명
2013타경 29880	1	화순군 화순읍 대리 258 965㎡ [매각제외건물, 원할법정지상권설정여지있음]	대	144,750,000 144,750,000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축
2013타경 10145	1	북구 각화동 330 899㎡	대	861,902,840 861,902,840	일괄매각, 제치외 건물포함, 수목포함, 옥책3,4도시간 획시설도로지축
	2	동소 330-3 193㎡	답		
2013타경 26119	1	북구 신안동 502-7 501.8㎡	대	2,646,335,350 2,646,335,350	일괄매각, 제치외 건물, 조경수및조경시설포함
	2	북구 무등로161 1층609.2㎡ [주차장] 2층568.9㎡ [전시장] 3층531.9㎡ [전시장] 4층633㎡ [사무소] 지하층58.9㎡ [대피소] 제치외 창고 등 230.15㎡	주차장 등		
2013타경 21756	1	영광군 백수읍 하사리 358-1 1368㎡ [공유자장충현지분2분의1전부]	창고용지	106,056,510 106,056,510	일괄매각, 제치외 건물포함, 공유자 우선매수권행사제한
	2	동소 358-6 1147㎡ [옥책1과지분동일]	창고용지		
2013타경 28207	1	동소 477 가동호 458.43㎡ [옥책1과지분동일]	농산물집하장		
	2	동소 477 나동호 196.1㎡ [옥책1과지분동일]	지문창고		
2013타경 21756	1	영광군 백수읍 백수로 477 2동호 161.28㎡ [옥책1과지분동일]	사무소및관리사		
	2	서구 양동 113-1 809.9㎡	대	1,701,401,000 1,701,401,000	일괄매각, 제치외 건물포함, 옥책2공정현황및포탈사우실

[기타]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재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1.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않는 최고거래가격인 매각대상지목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대상지목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해당 매각대상으로 삼을한다.  
 2. 매각기일: 2014. 4. 10. [목] 10:00  
 3. 매각결정기일: 2014. 4. 17. [목] 14:00  
 4. 매각장소: 광주지방법원 입찰장  
 5. 매각방법  
 ① 입찰방법에 비하여 기일입찰표에 사전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과 동등하게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된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고거래가격의 1% [100만원]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현금 또는 현금의 지급이수표 또는 현금 증빙하여야 한다. (보증금 반환보증서를 제출한 문서[입찰 보증서를 증빙하여도 불요])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관공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거래가격으로 선정하고,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목록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④ 최고거래가격인 경우 추가입찰을 실시하지 않음에 동의한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일시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결정일시에 확정된 대금지급금과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지급금이란 최종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한다. 다만, 매각대금으로 지정된 3일(3일)까지 중첨 매수인이 매각대금 을 지어지지, 매각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된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상권등기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용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용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여, 국민주택개발행위등 기타한 신청서를 병행 제출하면 방어진 위 임기를 속박하여 준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책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지상권과 다른 실용성 납부보다 먼저 주된특권설정권을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 자득점권을 가진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 반환이 매수인에게 인수하여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② 일반인과의 계약에 체결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영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편발행 인사장(신청서)에 비치하여 열람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에 참여하신다.  
 ③ 특별매각조건에 내용은 매각물건영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과 낙찰금에 대한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한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찰명령을 첨부한 위장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등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거래가격인도 결정된 후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에 동의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은 매각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청을 공고되는 물건의 최종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편발행 게시문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영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 총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 [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검색]  
 ※ 대법원 총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과하도록 정하여지지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즉시 시 수정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매각물건이 신청이나 항고, 대법원신청이나 순회배상의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신청되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물건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영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4. 3. 26.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하순원